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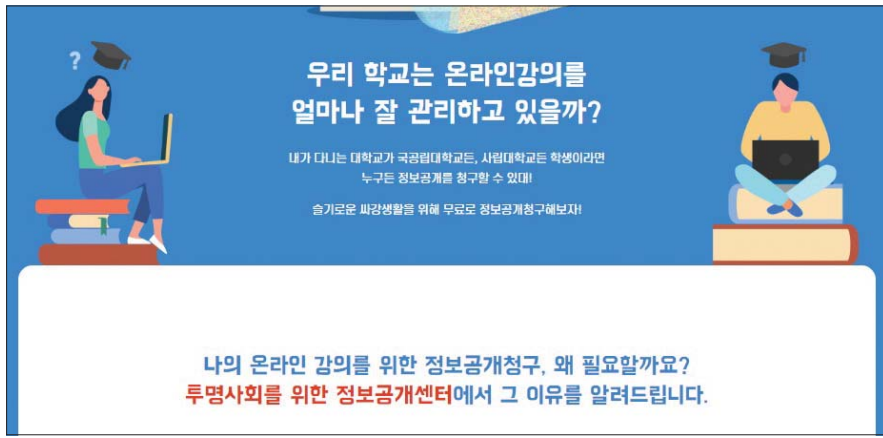
대학 정보공개청구 나선 학생들 “등록금 사용내역 알아야”

대학 소요비용에 대한 의구심 전제 사용내용 받지 못해 정보접근 불가 “대학, 관리 의무 하고 있는지 파악”

정부가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한 대학에는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를 둘러싼 학생들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이 재정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침묵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과거 수만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뤄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섰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 캡처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알리고 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화난사람들’이 가장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곳은 한림대다. 한림대에 정

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29일부로 100건을 넘어서 박재천 변호사가 한림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호서대, 백석대, 강남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북대, 한림대 등 13개 대학에서 각 100명 이상이 신고해 대학 측에 정보공개청구 진행한 상태다.

박재천 변호사는 “만약 정보공개청구로 특정 대학이 온라인강의와 관련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나타난다면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1일 대학생들이 발표한 집단소송을 뜻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를 주축으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집단소송에는 운동본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의 학생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학이 그간 반환 불가 이유로 주장해온 ‘방역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서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이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교방역, 온라인수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대학 당 2억여원에서 8억여원이 사용됐다.

일부 대학이 올해 재정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아왔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감소세도 예상보다는 적었다. 대교협이 집계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대학생 수는 4월 30일 기준 전국 138만 9735명으로 지난해 141만 6867명에 비해 1.9% 감소했다. 올 1학기 전국 대학 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평균 5억 6800만원 가량이 줄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학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접근이 불가하다”며 “정부에서는 1인당 40여만 원 반환을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서울공연예고 특목고 지정 취소

운영문제·반복적 감사, 주요 원인 청문절차 거쳐 최종지정 취소 결정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 학생들이 부적절하게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수목적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 소재 4개 예술계열 특목고 평가 결과, 서울공연예고만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6일 진행된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에서는 서울공연예고의 반복적 감사 처분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

앞서 서울공연예고는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민원이 제기되며 2018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특정감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 선임 부적절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절 집행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일부 의혹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통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서울공연예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와는 다르게 청문 이후 교육부의 동의 절차는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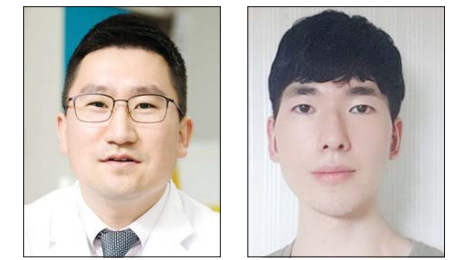
순천향대 문종석 교수팀,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한당뇨병학회 우수논문 선정 항비만 효과 약물 지방산 유도 주제

순천향대는 지난 1일 문종석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교수와 조승일 대학원생이 대한당뇨병학회가 선정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논문에서 문종석 교수는 교신지자로, 조승일 대학원생은 제1저자로 ‘항비만 효과 약물 PF-04620110에 의한 지방산 유도 NLRP3 염증복합체 활성화 억제 기능 확인’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문종석 교수는 연구를 통해 ‘항비만



문종석 교수

조승일 석사과정생

효과를 가진 PF-04620110 억제제와 이비만 관련 지방산 유도 NLRP3 염증복합체에 의한 대사염증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퇴직 후에도 학교 사랑... 김명신 선생, 1억 기부

고려대 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 37년간 고려대서 직원으로 근무

고려대에 37년간 근속한 퇴직 직원이 코로나 극복과 의학 발전을 위해 학교 측에 1억을 기부했다.

2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에 1억을 기부한 김명신 선생(54년생)은 1974년부터 2011년 퇴직할 때까지 37년간 고려대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기부자 뜻에 따라 5000만원은 ‘KUPRIDE CLUB’의 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 위기 극복 장학금으로 쓰이고, 5000만원은 고려대의료원 의학발전기금으

로 쓰일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 고려대 본관에서 김명신 선생과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기부식에는 김명신 선생과 정진택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김신곤 기금사업본부장, 백나실 부장이 참석했다.

기부식에서 김명신 선생은 “요즘 같은 때 고려대에 기부하면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아픈 아이들 소아 의료 쪽도 지원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하게 쓰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이동희 교수

창업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국민대 이동희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제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한국창업교육협의회(이하 KAEE)는 교육부 산하의 국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및 비 LINC+ 대학 창업교육센터와 창업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최대 창업 교육 협의체이다. /이현진 기자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빠르게 변화되는 방위산업 관련 통계 정보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는 방산육성정책 등에 이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일 “방위산업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등 5대 주요 통계를 매분기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연도별 주요 통계도 이듬해 6월까지 추정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는 방산업체 88개(’20. 6월 기준)를 조사대상으로 ▲총 매출액 ▲해외 매출액 ▲인원 ▲가동률 ▲영업이익 등의 항목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다.

그간 방산업체 통계는 매년 연도별로 조사됐다. 방사청의 ‘방위산업 실태조

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 연도 다음 해 말 또는 2년 뒤 첫분기 때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정책수요에 비하여 제공되는 시점이 늦어 방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부족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방위산업 통계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과 함께 불분명한 출처나 잘못된 방위산업 통계자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위산업 5대 주요 통계를 방사청 홈페이지에 분기·연도별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산업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산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